

녹색건축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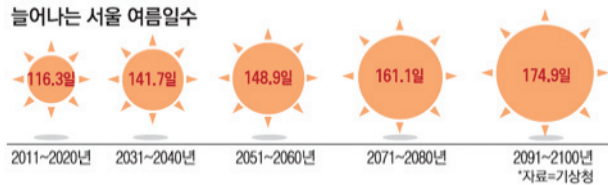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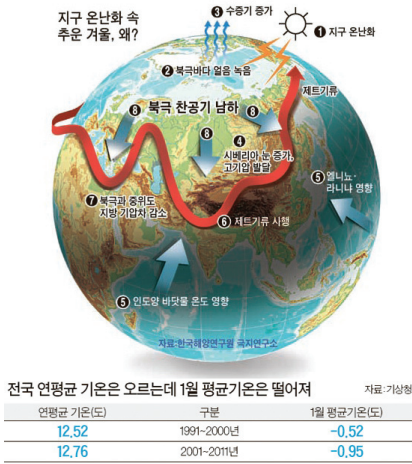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온난화에 따른 북극곰의 힘겨운 생존일기, 지구 온도상승에 따른 생태계 파괴, 해수 온도 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변화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일련의 기상이변에 대한 정보를 뉴스나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하여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 정보를 접하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그 심각성은 TV에서나 나오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이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온난화에 따라 지구 연평균 기온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 0.24℃ 올랐지만 1월 평균기온은 오히려 0.43℃ 떨어졌다. 온난화라면 일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겨울철 기온이 더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북극진동에서 찾고 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북극해 얼음이 녹아 얼음이 사라진 바다에서 수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증가한 수증기가 시베리아에 많은 눈을 내리게 함으로써 눈이 햇빛을 반사해 시베리아 대륙고기압을 일찍 발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대륙고기압이 발달하면서 편서풍인 제트기류가 남북 방향으로 사행하면서 흐름이 느려져 찬 공기

박기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bummyp@korea.kr



[그림 1]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의 기후변화(자료, 기상청, 매일경제)

가 중위도 지방까지 내려오게 되고 결국 한반도는 온난화로 인하여 예년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최근 기상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기상이변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를 가정해 예측한 결과, 1980년 후 서울의 평균 여름일수는 지금보다 2개월이 길어진 175일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서울의 폭염일수는 현재 11일에서 83일로 늘어나고 열대야 일수도 8일에서 82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예년보다 더 더운 여름, 예년보다 더 추운 겨울이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상 변화는 에너지 수요를 급증시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게 된다. 아울러 석유 등 해외 자원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주요 선진국들은 극심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파괴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지구 온도상승을 2℃ 미만¹⁾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각종 국제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 변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를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에 공식 발표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금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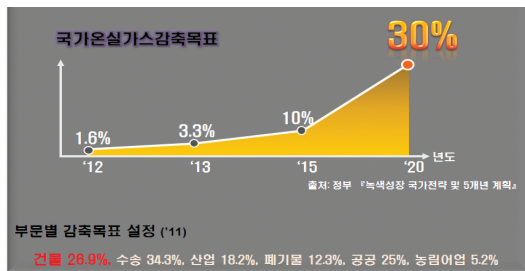
1) 산업혁명 이후 0.7℃ 상승하였으며 2℃를 넘게될 경우 지구환경에 비가역적인 움직임이 시작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이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부문 중 건축물 부문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 추세를 감안할 때 40%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건축물 부문은 감축 잠재력이 높고 산업이나 수송에 비해 감축에 따른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효율 개선은 단기간 내 투자비 회수가 용이하며, 에너지비용 절감, 에너지안보 증진, 기후변화 적응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를 2020 BAU 대비 26.9%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서 25.2%, 기존 건축물에서 49.8%, 행태개선을 통해 24.9%를 감축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건축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제로에너지 건축 목표 년도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



[그림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며, 기존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제도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2013년 2월부터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총 6장²⁾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법 시행일에 맞추어 제정되었으며, 2013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관련 규칙 및 기준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칙과 기준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인증, 신축 및 기존건축물에 대한 성능기준, 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 금융지원,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녹색건축 조성지원을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 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등은 기존 건축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던 내용들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이관되었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기준,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 시범사업 등은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도입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필요한

2) 제1장 총칙,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대책,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제6장 보칙.

사항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아울러 녹색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그간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부분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 토대 마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단계적이며 체계적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계획 수립 체계를 구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5년 단위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정책을 토대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목표 설정, 정보체계 구축, 인력 양성, 시범사업, 건축자재 및 시공 등 녹색건축 조성 촉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담기게 된다. 현재 금년 12월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계, 학계,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계획들은 단순히 계획 수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황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방향을 5년마다 검토하고 수정하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계획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자체간의 녹색건축 조성 정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에 대하여 매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 및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계획이 수립될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을 보다 체계적이며 효

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녹색건축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최초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대한 정보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서울 및 인천 등 수도권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였으며, 금년 중 5대 광역시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전국 68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 정보를 구축할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DB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다양한 녹색건축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활용하여 지역별, 건축물 용도별, 규모별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량 통계와 주민정보를 연계할 경우 거주자의 특성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녹색건축 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된다.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기반으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녹색건축 활성화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토대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간이 진단도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들이 상세한 성능진단을 하는 체계를 갖추므로써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그린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린 리모델링 후 당초 기대 성능 대비 실질적인 사용에 따른 성능 진단도 가능하게 되며, 효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인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구축된 에너지 사용량 통계 정보를 활용하여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성능정보 등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고 공개함으로써 그린 리모델링 관련 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린 리모델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의 대상 발굴·개선·점검 등은 공공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후 민간 건축물로 확산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건축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주자에게 에너지 성능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자발적인 에너지 성능개선 또는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통하여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및 업무시설 3,000 m² 이상의 건축물 거래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기된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자발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거나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너지소비 증명서를 통한 건축물의 성능 정보 공개를 통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에너지절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관련 정책, 기술, 정보, 교육 등 녹색건축에 대한 종합 포털 그린투게더를 구축하였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그린투게더를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며 녹색건축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향후에는 에너지 성능뿐만 아니라 개선에 필요한 재료, 성능, 가격 등 종합적인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게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예정이다.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정보를 활용하여 그린 리모델링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의 시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비용·고효율 그린 리모델링 또는 리노베이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창업 등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설계단계부터 연간 에너지 소요량을 평가하는 대상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신축건축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현재³⁾ 용도별 연면적 2,000~10,000 m² 이상에서 금년 9월부터는 500 m² 이상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점수도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절약계획서 대상의 확대에 따라 관련 업무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약계획서 검토에 따른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의 인력 증원과 더불어 검토기관을 추가 지정

3) 바닥면적 기준 기숙사·병원 2,000 m² 업무시설 3,000 m² 학교 10,000 m² 이상
4) 건축물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설계된 건축물과 동일한 형태에 법적 요구조건을 반영한 표준 건축물보다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더 적도록 설계

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계획서와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소비총량을 제한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제한 적용대상 및 허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허가 기준 강화와 더불어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년 9월부터는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소비총량제,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을 연면적 3,000 m²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관련 기준 강화와 더불어 녹색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조정 설치면적,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도 마련하였다. 녹색건축 기준 및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높이 등 완화 항목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녹색건축물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신축 건축물의 녹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건축물 성능향상 유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50%를 감축하여야 한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단열, 설비기기 효율,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 에너지 관련 허가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만, 기존 건축물의 경우 정부 규제만으로는 민간건축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적용 대상이 되는 전환 대상과 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에너지 성능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공공 건축물의 리모델링·중축·개축·용도변경·대수선·수선(창호·단열재·설비교체 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살펴본 신축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에 따라 병원 및 대학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범주 내에서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을 설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허가권한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하였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지역내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국가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성능등급 증서를 발급하고 매매·임대 시 첨부 서류로 제출토록 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이다. 선진 사례를 토대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건축물 소비



[그림 3] 그린투게더 홈페이지



[그림 4]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서

증명제를 도입하였다.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부동산 거래 시 거래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녹색건축물 전환을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증명제 적용 대상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m²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규모 및 용도를 고시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다. 2013년 서울을 필두로 수도권을 거쳐 2016년 전국단위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성능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린 리모델링은 투자비에 대한 높은 공사원가 부담과 투자비 회수의 불확실성에 따라 모두들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주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유도방안이 필요하지만, 자발적 유도를 위한 정책이나 재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저비용·고효율 기술개발, 거주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모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우수한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금년 처음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을 10개 선정하였으며, 기획설계비와 그린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시공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예산만으로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외 공공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등 재원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여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민간부문으로 확대시켜나갈 예정이다.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및 사업모델 발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저비용·고효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호 개선, 외피 성능 개선, 설비 성능 개선 등 그린 리노베이션에 대한 각종 저비용·고효율 기술 개발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활성화시키는데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재실 상태에서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저렴한 기술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 연구개발과제로 시장수요 기반형 그린 리모

델링 연구를 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도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건설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센터 지정 등 녹색건축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기준들을 마련하였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활성화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전문 자격제도인 에너지 평가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평가사는 녹색건축센터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응시절차, 수수료 등 구체적인 내용은 5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평가사 제도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유도와 신속한 인증 및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평가사 제도 도입과 더불어 녹색건축물 전문가 양성기관과 전담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대상은 녹색건축센터, 녹색건축물의 설계·감리·교육관련 업무 수행 기관 또는 단체, 건축물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이며 지정된 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실적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정 취소에 대한 기준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는 녹색건축 업무가 대폭 확대되어 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녹색건축 조성사업 시행 등 관련 업무⁵⁾를 전담할 전문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녹색건축센터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녹색건축센터는 정책 지원과 더불어 각종 녹색건축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녹색건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혹자는 녹색건축으로 인하여 건축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불만을 늘어놓는다. 아름답고 튼튼하며 기능적으로 편리한 건축을 만드는 것도 벅찬데 녹색건축이라는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축에 있어서 환경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공급위주의 도시 건설로 인하여 근대 건축가들의 관심에서 환경이 멀어져 있었을 뿐이며 인간의 삶에서 환경은 건축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은 풍수지리를 토대로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이었으며, 고대 로마시대 비트루비우스도 건축십서에서 건축가는 의술과 하늘의 별과 천체 이론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에 있어서 환경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지구온난화를 계기로 건축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인식되고 있다. 녹색건축은 새로운 건축문화로 확산될 것이며, 건축과 기술이 통합된 인간의 생활을 표현하고 환경에 충실한 건축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질 것이다. 따라서 건축가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자들의 의무와 책임도 증가하고 있다. 녹색건축은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통섭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5) 녹색 건축기술연구, 녹색건축물 인증업무, 에너지성능 평가, 건축물에너지 전문가 교육 및 육성, 녹색건축 DB구축·운영 등